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한국의 향후 대응전략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Korea's Next Step)

박 수 용(Su- Yong, Park)*, 대구보건대학교 유통경영과 교수
이 상 경(Sang- Kyung, Lee)**, 대구보건대학교 금융회계과 부교수

투고분야 : 경영정보컨버전스

702- 722,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15 대구보건대학교 유통경영과(인당관7414호)
T) 053- 320- 1823, 010- 3555- 0197
F)053- 320- 1830
parksy@dhc.ac.kr

* 제 1저자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투고일:2013.6.20. 심사일:2013.7.20. 게재확정일:2013.8.30.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한국의 향후 대응전략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Korea's Next Step)

요 약

본 글은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 제고 및 강대국 간 주도권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내 TPP 추진, 특히 日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확정에 기반 한 경제대국간 역내·외 무역구조의 변화와 TPP에 관련된 주요국들의 참여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요충지로서의 부상으로 인한 향후 한국의 TPP 참여의 대응 과제에 대해 논하면서 TPP 참여선언추진을 촉구함에 글의 목적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related countries background why they have to decide to join this trend after FTA. In addition,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call attention for Korea's benefit of TPP.

Key Word: 경제협력체, 동아시아, TPP, FTA

I. 서론

일본이 금년 7월부터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것 이란 세간의 예상과 달리 돌연 TPP 참여를 검토하고 나섰다.

TPP가 세계 총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대국 한국의 TPP 불참은 어불성설이다. 국내에서는 TPP 가입여부가 아닌 참여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TPP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과 TPP가 타결된 이후 나중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실익과 전략적 활용도를 고려하면 TPP 조기 참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최근 개별 국가들 간에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부터 세계 최대 자유무역 권역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이 무역 개방을 놓고 합종연횡이 한창이다. 겉으로는 모두 주변국들과의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자국에 최대한의 이득을 끌어내기 위하여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쁘다.

TPP는 지역주의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제통합으로 관세철폐를 골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의해 제도화된 지역협동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통상협정 전반에 걸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2000년 이후 지역주의 공백지역에서 벗어나 FTA를 매개로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은 추락한 경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흡수하여 자국의 수출 증대와 고용 확대에 연결하려는 의도로 새로운 지역 구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추진하여 경제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의 FTAAP 추진이 21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TPP를 체결하고, 이를 발판으로 FTAAP를 실현하려는 단계적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미국과 동아시아의 경제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을 언급하고 APEC과 한·미 FTA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발전시킬 가장 주요한 통상 의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은 TPP의 논의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견제하는 반대'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G2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TPP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황적 인식 때문이다.¹⁾

반면 최근 일본은 FTA 추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농업 개방에 대한 부담 등으로 FTA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것과 달리,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참가하고, EU와도 FTA 협상을 개시하는 등 최근 다수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FTA 추진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2012년 이후에만 해도 페루와 FTA를 발효하고, 몽골,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하 TPP로 약칭).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남미연합(USA N: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중남미-카리브해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유라시아경제공동체(EC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등의 형태로 지역의 제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는 네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ASEAN+3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FTA(EAFTA), ASEAN+6의 포괄적 동아시아 경제연대(CEPEA), APEC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의 FTA인 FTAAP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써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로 요약할 수 있다.

****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2006년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2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FTA구상이다.

캐나다, 콜롬비아 등과의 FTA를 비롯하여 한·중·일, RCEP* 등의 FTA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호주와는 협상 타결에 일부 쟁점만을 남긴 상황이고, 터키와도 FTA 협상 출범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FTA 추진이 대부분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형국이란 점이다. 미국, EU, 페루, 터키, 콜롬비아(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 진행 중) 등은 우리나라가 FTA를 선점한 국가이나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이고, 호주, 캐나다 등은 한·일 양국이 FTA 선점을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다. 몽골의 경우 일본이 먼저 협상을 개시하며 한 발 앞서고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등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FTA 추진을 따라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또한, 일본 경제 재건을 위한 주요 성장 전략으로 FTA를 선택한 점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FTA를 구조개혁, 농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다.²⁾

일본의 FTA 추진은 대부분이 협상을 막 시작하는 단계로, 현 시점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의 FTA 추진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들 속에서 본 글은 먼저 TPP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추진동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관련 주요국들의 입장을 분석한다. 동시에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요충지 부상으로 인한 TPP 참여의 중요성을 밝히며 한국의 효과적 대응방안, 참여방안에 대해 논할 것이다.

II.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1. TPP의 개념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 목적으로 출범한 환태

* RCEP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평양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또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협상 초기에는 경제 규모가 작아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협정에는 상품거래,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 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 정책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TPP는 무역관세 철폐 원칙과 개방성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려 한다. 오는 2015년까지 관세철폐 이외에 농업, 노동, 환경보호, 정부구매,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무역, 기술무역 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원산지 표준, 경쟁정책 등을 포함한 수준 높은 FTA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 확산에 대해 타결 가능성이 적은 WTO 도하 라운드와 원칙적 합의일 뿐 이행의 의무가 없는 APEC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APEC 체제 하에 탄생한 만큼 그 원칙 중 하나인 개방성을 견지하며 자유무역 의지가 강한 소수 국가들이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한 후 기존 체결국간의 협상 동의를 거쳐 점차 회원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TPP는 여타 FTA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TPP는 최종적으로는 FTAA P 실현을 위한 중간 단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 받고 있다.

기존의 TPP 회원국 이외에 일본, 미국과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들이 가입을 선언을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발 가입국은 이미 체결된 TPP내용을 대부분 수용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³⁾

이렇듯 TPP는 비관세장벽 분야나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고 있는데 현재 21개 분야에서 24개 분과 및 작업반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

중이며, 환경, 노동, 분야 횡단적 사항 (Cross-cutting trade issues) 등의 새로운 분야를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⁴⁾ 21개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1. TPP 교섭 21개 분야

교섭분야	교섭에서 취급되는 주요 내용
1. 물품시장 액세스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인하 방법 등
2. 원산지 규칙	관세의 감면 대상인 제약국의 원산품(제약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나 증명제도 등
3. 무역 원활화	무역 소송의 간소화 등
4. 위생식품 검역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물이나 식물의 병을 방지하기 위한조치(SPS 조치)의 실시에 관한 물
5. 무역의 기술적 장해	국별 제품의 안전규격이 무역의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하는 규격에 관한 물
6. 무역구제	어떤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1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세이프 가드)의 발동 조건
7. 정부조달	공공사업의 발주 물
8. 지적재산	모방품, 해적판의 단속
9. 경쟁정책	카르텔 등의 방지를 위한 경쟁법·정책의 강화, 정부 간 협력 등
10. 越境서비스	서비스 무역에서 수량규제 등의 금지, 무차별원칙 등의 물
11. 상용관계자의 이동	상용의 입국·체제 수속의 간소화
12. 금융서비스	국경을 넘어서는 금융서비스 제공 물
13. 전기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액세스 등에 관한 의무
14.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환경·물 정비를 위한 원칙 등
15. 투자	내외 투자자의 무차별 원칙,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 수속 등
16. 환경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의 금지
17. 노동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완화의 금지
18. 제도적 사항	협정 운용에 관한 협의기관의 설치 및 그 권한 등
19. 분쟁해결	협정 해석의 불일치 등에 의한 제약국간의 분쟁 해결 수속
20. 협력	협정협의 사항의 이행체제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지원
21. 분야횡단적 사항	복수 분야에 걸친 규제에 의한 무역에 대한 장애 방지

2. TPP 부상과 의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상품·서비스교역의 교역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FTA로서 12개국이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 FTA 협상 가운데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일한 협상으로서 TPP 협상은 2010년 이후 19차례에 걸쳐 진행(일본은 18차 회의부터 참석)되고 있다.

TPP는 관세협상 참여국간 관세율 격차가 커서 적용 관세율 조정이 쉽지 않고 각국의 민감 품목(특히 농산품)을 인정하는 문제가 협상의 쟁점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적용규정의 강화,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등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간의 동등 대우, 국가 투자자간 소송 포함 여부를 두고 의견 대립하고 있다. 또한, ILO* 핵심원칙 준수, 아동 노동력 착취로 생산된 상품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둘러싼 이견도 문제로 남아있다.

4개국 간 소규모 협정이었던 TPP는 미국의 협상 참가를 계기로 현재 12개국 간 협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아·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을 목표로 '13년 연내 협상 타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궁극적으로 APEC 회원국 간의 FTAAP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TPP는 현시점에서 가장 구체화된 협상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세계 GDP의 38%, 교역 규모의 26%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10.10월 당시 칸 일본 총리가 TPP 참가 검토의사를 밝힐 당시 TPP를 통해 FTAAP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고, '13.3.15일 현 아베 총리 역시 TPP 협상 참가를 결단할 때 TPP를 통해 아·태 지역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기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일본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919년 4월 베르사유조약(Treaty of Versailles)의 '제13편 노동'에 의거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 편입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08년 8월 현재 회원국은 182개국이다.

역시 TPP를 FTAAP로 가는 경로로 인식하며, TPP 참여를 통해 아·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 질서 제정에 기여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TPP가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

는데, 이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세계 1위의 미국이 FTA를 체결한 것과 동일한 결과여서 EU와 NAFTA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TPP 협상 참가국의 개요

	인구 (만명)	GDP (억달러)	1인당 GDP (달러)	FTA 체결현황 ²⁾			
				미국	일본 ³⁾	한국 ³⁾	중국 ³⁾
미국	31,194	150,757	48,328	-	X	O	X
일본	12,790	58,970	46,108	X	-	협상중	X
캐나다	3,444	17,811	51,716	O	협상중	협상중	X
호주	2,248	14,905	66,289	O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뉴질랜드	441	1,618	36,688	△	X	협상중	O
칠레	1,725	2,509	14,552	O	O	O	O
멕시코	11,373	11,583	10,184	O	O	협상중	X
페루	3,001	1,785	5,948	O	O	O	O
브루나이	39	164	41,662	X	O	X	X
말레이시아	2,896	2,879	9,941	△	O	X	X
싱가포르	531	2,656	50,000	O	O	O	O
베트남	8,932	1,227	1,374	O	O	X	X

주 : 1) 인구, GDP 및 1인당 GDP는 2011년 기준
 2) O는 기체결, △는 TPP에 통합
 3) 한국, 일본 및 중국은 ASEAN과는 기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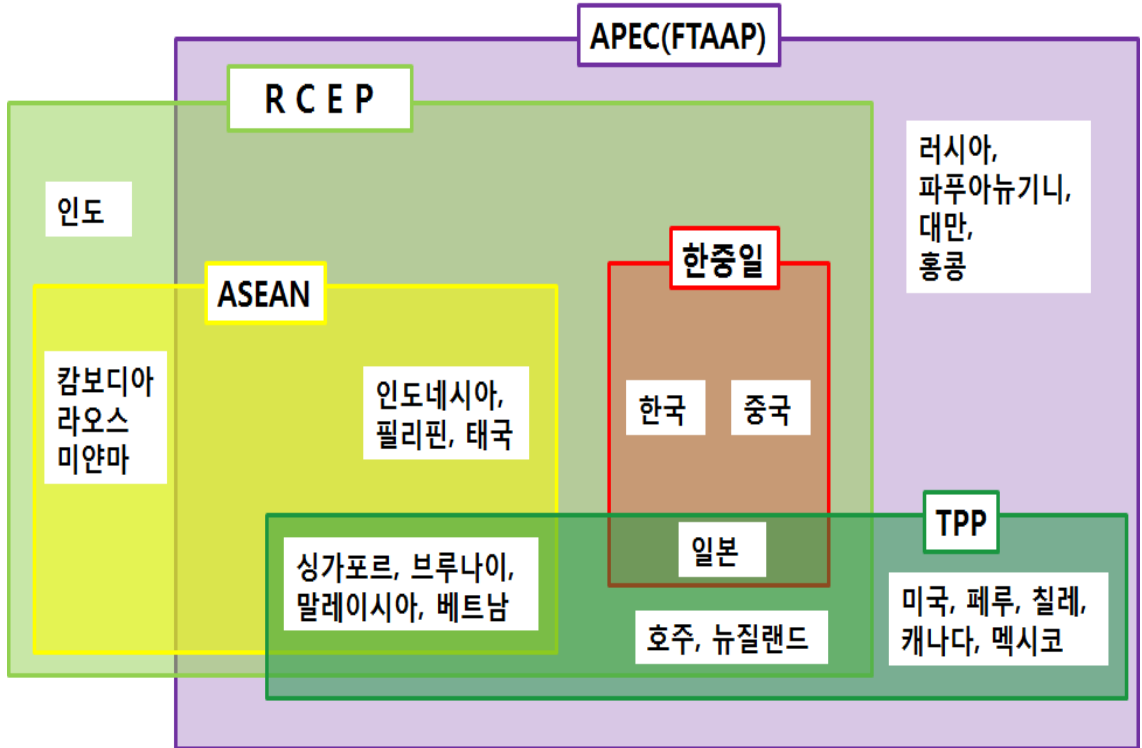


그림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논의

Ⅲ. 주요국의 TPP 참여배경 및 동아시아의 부상

1. 미국의 TPP 참여 배경

미국의 TPP참여는 한마디로 경제회복과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및 전 세계에서 통상주도권을 강화한다는 원대한 포석을 깔고 있다.

기존 P4(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국가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칠레와 싱가포르는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적 의미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TPP 협상을 추진하면서 호주, 베트남을 비

롯한 TPP 관심국 외에도 일본, 한국, 태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외연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TPP와 같은 거대한 지역무역협정을 성사시킴으로써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 자유무역 흐름에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TPP를 통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내경제 회복을 모색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경제위기로 인해 상당기간 저성장을 유지한 것에 기반 한 탈출방안 모색을 위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⁵⁾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서 TPP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아도 DDA보다는 TPP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가 미국통상정

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PP는 환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기존에 체결한 FTA를 통일화하는 21세기의 혁신적 무역협정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중심국과 주변국(hub-spoke) 모델의 변형형태로 평가되고 있다.⁶⁾ 즉 미국이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경제구도에서 배제되지 않으면서 동아시아국가들을 유인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경제통합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블록화를 통한 아·태지역의 거대 무역권 형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업보조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TPP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있는데, TPP를 모태로 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참여시키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⁷⁾

2. 일본의 TPP 참여배경

최근 일본이 FTA 추진을 가속화하게 된 것은 ①한국 등 주요 경쟁국의 FTA확대에 따른 위기의식 등 외적 동기, ②구조개혁 추진의 계기 마련 등, FTA를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자하는 내적 동기,* ③FTA 정책의 일관된 추진 등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⁸⁾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한국의 FTA전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TPP 협상에 7월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TPP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은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에서 중국(ASEAN+3)과 구별되는 ASEAN+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주장했다. 또한 日의 TPP 참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기적인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국가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TPP를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장기침체로 과거와 달리 내수보다 수출 의존적 경제성장 구도가 점차 고착되어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TPP 참가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TPP 불참가로 인해 상실하는 손실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의 수출 시에 일본이 수출상대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일본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일본 경산성은 일본이 TPP에 참가하지 않고, EU·HFTA, 中·HFTA도 체결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했을 경우, 2020년 일본제품이 미국·EU·중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상실로 인한 연관 산업을 포함한 손실액은 수출 감소가 8.6조엔, 생산 감소가 20.7조엔(부가가치인 GDP환산으로 10.5조엔)으로 확인하였다.

3. 중국의 TPP 참여 배경

중국은 아태지역 경제통합 수단으로 미국 주도의 TPP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었는데 이는 최근 TPP 확산을 보며 아태지역 통상주도권의 약화를 우려한 것인데, 중국은 동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ASEAN+3의 경제통합을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TPP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기존 중국이 체결한 FTA에 비해 개방 수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견제하면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 경제권 형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개발, 광서북부만 경제구개발 등을 중국서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경제발전에도 활용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국 역할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TPP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으로 판단하여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TPP 참여 여부 검토를 언급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⁹⁾

* 일본이 TPP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수출 2.6조 엔, 소비 3.0조 엔, 투자 0.5조엔, 수입은 2.9조 엔으로,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실질 GDP가 3.2조 엔, 0.66%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됨

4. 동아시아의 부상

한편 오늘날, 동남아시아가 Post-BRICs 경제권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및 BRICs 경제 둔화 가운데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강대국들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를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신흥 글로벌 생산거점이자 잠재적 거대 소비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중국 소비시장에 근접해 있는 생산거점으로,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급증하고 있는 점, 중산층·도시화 확대, 높은 내수 비중으로 거대 소비시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최근 아세안을 포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동남아시아 경제권이 ‘아시아 경제통합’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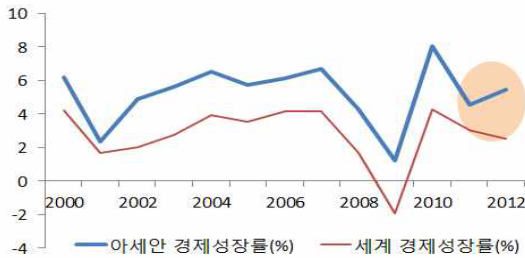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및 아세안 경제성장률 추이¹⁰⁾

* 1. 아세안(ASEAN) 경제성장률은 2011년 4.7%에 2012년 5.5%로 상승
 2.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세안 경제권이 2013년 5.2%, 2014년 5.6%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는 석유 2,130억 배럴(전세계 연간 석유 소비량의 약 7배 규모), 천연가스 2,000조 입방피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중국 측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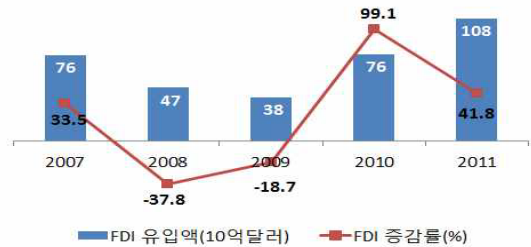


그림 3.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추이

반면, 높은 대외 의존도, 제도적·정치적 불안정성, 취약한 인프라 시설 등은 동남아시아 경제권의 주요 리스크로 손꼽히고 있다. 아세안 경제는 수출, 투자 등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금융불안 등 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며 최근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

IV. 한국의 TPP 참여이유 및 향후 과제

RCEP와 한·중·일 FTA와 같은 무역협상에 이미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굳이 TPP 협상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RCEP나 한·중·일 FTA 협상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데 비해 TPP는 이미 19차례의 협상을 거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지만 TPP는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나 한·중·일 FTA보다 일찍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TPP는 21세기 무역협정을 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 로드맵***은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축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도 TPP 참여는 필수적이다.

*** 해외시장 개방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는 내용을 축으로 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13.6.19

이에 TPP협상참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는 협상 내용을 세세히 알 수 없다는 TPP의 비밀주의에 있다. 둘째, 협상후발 참여국은 합의가 끝난 협상분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21개 협상 챕터 중 5~6 개 분야는 협상이 이미 타결됐고 다른 분야들도 상당수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상완전 타결 이후에 가입한다면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여지가 사라진다. 셋째, 협상 참여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상참여국들과 사전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조속히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기회비용의 차이는 크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협상 참여 연기의 논거인 피해산업 발생이나 사회적 갈등 등 요인은 시간이 지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편, 중국이 TPP를 자국 견제를 위한 경제블록 구축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TPP 참여시 한중 관계의 악화가 우려되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의 적극 추진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TPP의 세력이 커질수록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중 FTA 적극 추진은 일본의 FTA 추진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참여 시기에 따라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본의 TPP협상 참여가 확실시 된 지금, 뒤따라 빠르게 참여하여 일본의 시장선점 효과를 상쇄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아태지역의 통상 규범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 및 ISD 등 분야에서 일본과의 공동으로 협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일본의 TPP 참여는 TPP 타결 시점을 지연시킬 것이며, 이는 한국의 시간적 여유 확보에 유리하나, 한국이 규범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TPP 참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국내외 정치작업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TPP 참여 희망의

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적으로 참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내적으로는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TPP 주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참여 여부를 타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TPP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협상으로 많은 협상 인력과 자원이 소요될 것인 바, 협상 참여에 대비하여 협상 인력 및 자원 보강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일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일본이 TPP 가입으로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선점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참여를 선언한 12개국 중 미국, 페루, 칠레, 베트남 등 4개국과 FTA를 이미 체결했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는 FTA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TPP에 참여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계산에 정부는 그 동안 TPP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¹¹⁾ TPP가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고 한미 FTA로 얻은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데다 의존형 경제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TPP참여가 필수적이다.

강대국에 편승하는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공동자원개발기구나 '아시아 경제통합' 구상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해외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여 글로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남아 개도국의 대규모 BOP(Bottom of the Pyramid; 저소득 계층) 시장을 겨냥한 '값싸고 팬찮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정기술 R&D 지원을 확대하는 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안목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교류 체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PIIE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GDP가 0.1%, 수출은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우리정부는 향후 일본과 중국의 아세안 FTA 입지 강화에 대응하여, TPP 협상참여를 추진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아세안+3과 아세안+8의 동력이 약화되었지만, 한국은 ASEAN+3과 ASEAN+8에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존중과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에 따라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¹²⁾ 그 이유는 각기 기능적으로 장점을 갖고 있는 다양한 구상들의 경쟁은 전반적으로 지역 협력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 중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모멘텀을 부활시키기 위해 대 아세안 접근법을 수정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중심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및 EU간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에 대한 조류도 점차 확산되고 있으므로,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협상 진전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평가하는 등 대응전략수립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VI. 결 론

TPP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입장은 단기간 내에 TPP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고, TPP 참가국 대부분과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분석은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각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온전히 그 나라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로 다양한 국적의 중간재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FTA, 특히 TPP처럼 자원, 노동, 기술, 시장 등 다양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의 경제 통합체는 양자간 FTA에 비해 원산지 규정

을 충족시키기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Post-BRICs* 경제권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포괄적 협력 Agenda를 발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선점 기회 확장 및 중소기업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정황상, TPP참여의 경제적·전략적 실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TPP 참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TPP 대응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RCEP은 주로 상품무역 자유화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자유화와 규범제정까지 고려하는 TPP와 그 활용도 면에서 차이가 난다. 더구나 RCEP을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일본이 최근 TPP 참여로 선회하면서 RCEP의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리 재고 지리 재고 머뭇거리다 만시지탄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용민, 『일본의 TPP 참가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함의』, p. 3, 2012
- 2) 명진호, 『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p. 6, 2013
- 3) 최세균, 정대회,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5, 2012. 2

* BRICs는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경제용어이다. 브릭스는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 4개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가 훨씬 넘는 27억 명(중국 13억, 인도 11억, 브라질 1억7000만, 러시아 1억 5000만)이나 된다.

- 4) 명진호, 『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한국 무역협회』, p. 11, 2013. 7
- 5) 권혁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망과 대응방향』, p. 7, 2011
- 6) Ann Capling, 『The TPP: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or the Securitization of Trade Policy?』,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p. 293, 2011
- 7) 홍순영, 『동남아시아, 글로벌 경제 요충지로 부상』, p. 3, 2013.
- 8) 명진호, 『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한국무역협회』 p. 39, 2013. 7
- 9) 『中, TPP 참가 검토...세계 무역판도 바꾸나』, 『한국경제』, 2013. 6. 1
- 10) 경기개발연구원, 『동남아시아 경제권 부상과 대응 방향』, p. 3. 2013,
- 11) 사동철, 『약세 엔화에 ‘TPP 날개’ 다는 일본』, p. 9. 2013,
- 12) 강선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p.17. 2011,